

출산율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확충과 영아보육 지원

이옥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육아지원정책은 부모, 특히 여성의 노동권과 양육권을 동시에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아동에게는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생초기 공평한 출발을 지원하는 기본적 국가정책이다.

육아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은 육아지원정책이야말로 불평등, 빈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핵심정책이라는 점을 일찍이 인식하고, 국가의 육아지원에 대한 국민적,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극적 육아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합의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한 시민사회가 공히 기여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러운 일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그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처할 국가전략으로서도 육아지원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경험한 국가들 가운데 이를 지혜롭게 극복한 나라들이 우선적으로 채택한 정책이 바로 포괄적인 육아지원 정책이다. 부분적, 잔여적 육아지원에 그치지 않고, 포괄적 육아지원 정책을 추진한 결과는 부모, 특히 여성에게 일과 육아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출산율이 제고되는 가시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년간 중앙정부의 보육재정이 2000억 원에서 5배가 넘는 1조 원 이상으로 증액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재정을 포함하면 과거에 비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 것이다. 여전히 부분적 지원이긴 하나 다행스런 일이다. 단기간에 육아재정 투자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국민들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나 출산 동기에 긍정적인 육아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체감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동안 정부의 육아정책은 주로 육아서비스의 이용료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육아 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못지않게 관심을 두어야 할 영역이 바로 출산 휴가제도와 영아보육 지

원이다. 다양한 육아지원정책 가운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을 격려하는 정책은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와 영아양육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이다.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는 부모의 일할 권리와 양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일과 양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만큼 인생초기 아동이 부모에 의해 안정되게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이 특히 강조될 수 있다.

의미 있는 연구들이 인생초기 부모와 아기의 애착이 중요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어머니의 직장복귀는 자녀의 월령 8개월 이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달심리학적으로 보면 인생초기 6~8개월까지는 부모 또는 일정한 양육자에 의한 양육이 애착 형성 등의 이유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절하다고 본다. 안정된 애착형성은 이후의 사회적 적응과 성격형성에 결정적이라는 증거가 아주 많다. 육아휴직제도의 확대와 육아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북유럽의 선진 육아정책국가들이 영아 초기에는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도록 제도화하고 1세 이후부터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하여 특히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의 보편적 확대와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이라도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보장 급여제공 방안이 필요하다. 출산 후,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의 급여가 불충분한 현행 제도에서는 차라리 직장 복귀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직업 단절의 위험과 생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영아를 맡아 돌보아줄 ‘괜찮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 육아휴직과 영아보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면, 부/모의 육아휴직 선택여부는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반영되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출산 한 어머니의 건강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어머니의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시행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관련 연구에는 여성이 출산 후에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고 있다. 출산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성의 출산기피와 출산 후에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영아보육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적 서비스가 보장된 영아보육시설의 접근성 확대가 절실한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영아 양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정부로서는 유급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예산과 1명의 교사가 3명의 아기를 돌보는 현행 보육제도 내에서 보육료의 일부를 부모에게 지원할 경우의 예산을 비교하고 각각의 정책 효과를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육아휴직과 영아보육 서비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두 제도가 동시에 확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